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범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수립
2013년도 지자체간 연계협력 신규사업 공모

거시경제 동향

2013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

기획 정보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주요내용(농업부문)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범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수립

※ 본 자료는 2013년 2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범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수립배경

-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11.9월): 17,720호 중 무허가 축사 9,925호(44.8%)
- 축산업 허가제·가축사육시설 거리제한 등 축산에 대한 관리·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 그러나 **축산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팽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안 발효 시 무허가 축사 폐쇄 등으로 인해 축산업 기반이 훼손될** 우려를 제기
- 이에 농식품부·국토해양부·환경부는 합동으로 7차례의 실무협의회, 4차례의 현지 실태조사 등 규제와 진흥 주체 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

□ 개선된 주요내용

-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조례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 미 제정 또는 하향 설정(20~50%)
 - (개선방안)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를 통해 조례 제정 또는 개정토록 협조 요청 및 독려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반 구축
-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 (현행) 가설건축물 재질은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
 - (개선방안)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일명 썬라이트), 바닥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축산분뇨처리시설 면제

- (현행)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 (개선방안) 축사 바닥에 왕겨 또는 톱밥을 도포 시 축사로 인정하고, 재입식 때 분뇨를 위탁처분할 경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 축사거리제한 재 설정

-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거리제한 기준 강화
- (개선방안)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권고안 또는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재 설정

○ 운동장 적용 확대

- (현행) 젓소에 한하여 운동장 허용
- (개선방안) 젓소뿐만 아니라 한·육우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축종으로 확대

○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 (현행)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허가 불가
- (개선방안) 가축분뇨법 개정 시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적법화 가능

□ 평가 및 기대

-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건축·축산분뇨 규제와 진흥 주체 간 소통 강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이후,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경우, 약 80% 수준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가설건축물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새끼돼지 컨테이너 확대 적용을 제외한 개선방안 적용 조사결과('12.12월), 약 71% 수준 적법화 가능할 것으로 파악

주요 농정 이슈_2

2013년도 지자체간 연계협력 신규사업 공모

※ 본 자료는 2013년 2월 21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지역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관심 폭발」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공모결과

- **122개 지자체가(사업주관 지자체 기준으로 53개소) 참여, 57개 사업에 총 2,158억 원(2013년 국비 소요 631억 원)을 신청**
- 지역별로 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부산·인천·대전이 각 1건, 대구·광주가 각 3건이며,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경기 4건, 강원 8건, 충북 2건, 충남 3건, 전북 9건, 전남 7건, 경북 6건, 경남 3건, 제주 2건을 신청(총 53건 지자체)
- 신청된 사업 중 가장 많이 차지한 분야는 문화관광분야로 26건, **농식품 분야는 21건**, 기타 기피시설인 광역 화장장, 보육시설,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사업도 포함
 - ※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 산업, 문화, 관광, 보건·복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창의적으로 기획·실행하는 사업으로써 300억 원 책정

□ 추진계획

- 금년도 연계협력사업의 조기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매칭비율, 보조금 중복성 등을 검토하고, 3월 중 지역발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말까지 대상 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
 - 성과창출 가능성,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창의성, 연계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선정 시 3년 이내, 총사업비 60억 원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를 기준 80~90% 수준을 지원할 방침**
- 아울러, 금년도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지역 간 협력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규모를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

거시경제 동향

2013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

※ 본 자료는 2013년 2월 18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전반적 동향

- **[13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2% 상승**(전년 동월대비 1.6% ↓)
 - **(농림수산물)** 채소류와 과일류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2.3% 상승**
※ 전년 동월대비 1.7% ↓
 - **(공산품)** 화학제품, 제1차금속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
※ 전년 동월대비 3.1% ↓
 - **(서비스)** 금융 및 보험 등이 내려 **전월대비 0.3% 하락**
※ 전년 동월대비 0.5% ↑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10월	11월	12월	1월 p	10월	11월	12월	1월 p
총 지 수	1000	-0.8	-0.7	-0.3	0.2	-0.5	-0.9	-1.2	-1.6
농 립 수 산 품	33.8	-6.9	-4.1	2.7	2.3	5.1	-2.0	-3.8	-1.7
곡	7.2	-1.2	4.5	0.5	0.3	5.1	6.3	5.7	5.7
채	6.6	-17.7	-3.4	10.7	11.1	25.9	28.8	28.0	24.1
과	2.6	-3.7	-47.1	5.4	2.6	93.8	2.1	0.3	-7.9
축	8.5	-7.4	5.1	-2.1	-1.9	-13.1	-16.2	-20.3	-13.0
수	5.5	-1.5	-2.2	1.9	0.0	-5.5	-6.9	-2.4	-2.5
공 산 품	611.4	-0.9	-0.9	-0.6	0.2	-2.3	-2.5	-2.7	-3.1
석	57.8	-2.2	-3.0	-1.2	0.1	2.0	-0.7	-2.6	-5.1
화	107.5	0.0	-1.1	-0.2	0.5	-0.6	0.5	1.3	0.0
1 차 금 속 제 품	115.1	-3.5	-1.2	-1.2	0.4	-11.6	-12.1	-11.8	-11.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통신장비	89.1	-0.5	-1.0	-0.4	-0.5	-2.2	-2.5	-2.9	-3.5
전 력 수 도 가 스	54.3	0.1	-0.1	0.0	1.2	4.9	5.2	2.8	3.9
서 비 스	298.1	0.2	0.0	-0.1	-0.3	1.5	1.5	1.2	0.5
운	41.0	0.1	0.0	0.4	0.3	1.5	1.6	1.7	1.5
금	50.6	0.7	-0.1	-0.5	0.0	2.1	1.8	0.8	0.8
전 문 서 비 스	30.9	-0.3	-0.5	0.6	-4.6	-1.8	-1.0	-0.3	-6.0
기 타 서 비 스	40.4	-0.1	0.0	-0.1	0.1	2.0	2.0	1.9	0.6

주: 잠 확정제제 도입으로 1월 지수는 잠정치, 2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 특수분류별

- **[식료품] 전월대비 1.2% 상승**
※ 전년 동월대비 1.4% ↑
- **[신선식품] 전월대비 5.7% 상승**
※ 전년 동월대비 7.6% ↑
- **[에너지] 전월대비 0.9% 하락**
※ 전년 동월대비 0.4% ↓
- **[IT] 전월대비 0.4% 하락**
※ 전년 동월대비 3.0% ↓
- **[신선식품및에너지 이외] 전월대비 보합**
※ 전년 동월대비 1.8% ↓

<특수분류 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2.9월	10월	11월	12월	12.9월	10월	11월	12월
식 료 품	69.5	1.4	-3.7	-2.2	1.3	6.8	4.7	0.9	0.3
식 료 품 이 외	930.5	0.3	-0.6	-0.6	-0.4	-0.3	-0.9	-1.0	-1.3
신 선 식 품	14.8	8.4	-10.6	-14.1	6.8	30.9	24.3	8.5	9.6
신선식품이외	985.2	0.2	-0.6	-0.4	-0.4	-0.3	-0.9	-1.0	-1.4
에 너 지	87.5	1.2	-1.0	-1.4	-0.7	6.2	2.8	1.6	-0.2
에 너 지 이 외	912.5	0.3	-0.8	-0.6	-0.2	-0.4	-0.9	-1.1	-1.3
I T	97.5	-0.1	-0.4	-0.7	-0.7	-1.7	-1.7	-1.8	-2.6
I T 이 외	902.5	0.4	-0.8	-0.7	-0.2	0.4	-0.4	-0.8	-1.1
신 선 식 품 및 에 너 지 이 외	897.7	0.1	-0.5	-0.4	-0.3	-0.9	-1.2	-1.3	-1.5

주: 잠 확정제제 도입으로 1월 지수는 잠정치, 2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기획 정보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주요내용(농업부문)

※ 본 자료는 2013년 2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관련 파일(원본)은 정보마당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5일 출범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선정하여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
-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를 ① (경제·과학)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② (고용·복지) 맞춤형 고용·복지 ③ (교육·문화)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④ (사회) 안전과 통합의 사회 ⑤ (외교·국방·통일)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
- 이러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1개 추진전략과 140개 국정과제**를 마련



□ 국정과제의 주요 특징

- 창조산업육성,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융합적 성격의 국정과제**를 다수 발굴
- 불요불급한 조직신설, 인력증원, 부처 기능 확대 등은 제외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
-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안전과 통합에 중점**
-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210개 입법 계획 마련**, 올해 안 대략 150개 이상 법안 발의할 계획
-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목표의 하위 전략에 포함되어 **의지가 약화됐다는 비판** 제기

□ 농업부문 국정과제 주요 내용

1) 농어가 소득 증대(국정목표 2_전략 9_국정과제 60)

- (개요) 재해지원, 직접지불제, 경영비 절감 등을 통한 **농어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FTA 지원대책 내실화** 추진
- 주요 추진계획
 - (재해대응) 실질적인 재해지원을 위해 **보험·지원제도 전면 개편**
 - (직접지불제) **쌀·밭직불의 단가인상 및 제도개선** 추진
 - (농업경영비 절감) 농자재유통센터 건립, 농자재 공정거래체계 확립, 농기계 임대 확대로 **농자재 구입부담을 완화, 농작업 대행도 확대**
 - (FTA 보완대책) **국내 대책 추진상황을 내실 있게 관리·보완**

2)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국정목표 1_전략 6_국정과제 38)

- (개요) 국내 생산기반 확대를 통해 **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위기 사전 대응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자주올 개념을 도입**하여 해외개발·비축 등 **안정적 해외공급기반 구축**
- 주요 추진계획
 - (위기상황별 대응 모델) 식량안보 모니터링 강화 및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식량위기 사전대응 시스템 마련**

- (우량농지 확보 및 농지 활용을 제고) 식량작물 재배에 필요한 **우량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겨울철 이모작 가능한 논을 대상으로 **밀, 보리, 사료작물 등 재배** 유도
- (곡물 수급불안 대응) 주요 곡물의 **자주올 목표 설정 및 국내·외 비축 확대**
- (해외에서 적기·적량 공급) **해외농업개발** 투자 촉진, **국가곡물조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외 곡물확보 및 도입 역량 강화

3)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국정목표 2_전략 9_국정과제 61)

- (개요) 기존 도매시장 중심에서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직거래 확산**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상생구조 마련**
- 주요 추진계획
 - **농·수협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유통단계를 축소, 생산자·소비자에게 혜택
 - 생협, 직거래, 사이버거래 등 **소비자·생산자 주도 新 유통경로 확산**과 **직거래 비중 확대**로 **유통망 간 경쟁체계 구축**
 -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가수의매 확대** 등 도매시장 유통 효율화 추진

4)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신동력(국정목표 1_전략 2_국정과제 12)

- (개요) 시장개방 확대, 사회·경영환경 변화 등에 대응, 농림축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
- 주요 추진계획
 - (농식품의 6차산업화) 생산과 연계, 유통·가공·외식·관광 등 2·3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농촌지역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 (농식품의 첨단산업화) 종자, 식품, 기자재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농식품을 최첨단산업으로** 육성
 -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분뇨문제 해결 및 생산체계 개선 등을 통한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추진
 - (산림부국 실현) 숲 가꾸기, 목재산업 육성, 산림복지 공간 및 도시숲 확충,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등으로 **산림가치 극대화**

5)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국정목표 4_전략 14_국정과제 85)

- (개요) **안전한 식품**을 통한 **소비자 건강 보호 및 신뢰 제고**
- 주요 추진계획
 -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 식품범죄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학생 안전지역 내 문방구점 등 식품 판매행위 금지, 「음식점 위생 등급제」 도입, 인터넷 불법 식의약품 유통판매 차단, 합동단속 추진
 -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및 소통전담조직 구축**)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위해소통센터」 설립으로 체계적 식품안전 소통망 구축
 - (**부적합 식품 차단·추적관리 강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17년까지 전면 확대,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쇠고기 전자적 거래신고 확대
 - (**농·축산식품 위생관리 강화**) GAP(농산물우수관리)·HACCP(식품안전인증) 적용 확대
 - (**식품안전 소비자 참여 확대**) 원산지 및 영양성분 표시 확대, 식품용기 그린마크 및 포장·유통 농수산물 표시제 도입,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축산물 관리에도 적용
 - (**급식소 위생 강화**) 급식조달시스템과 식중독 경보시스템 연계, 납품 전 안전성 조사 체계 구축,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오염된 해역·토양 등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식염 등 유통·판매 차단, HACCP 의무적용 확대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사전예측 수입검사 시스템’ 구축, 수출국 현지실사 강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

6)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국정목표 2_전략 7_국정과제 51)

- (개요)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만들기
- 주요 추진계획
 - (복지) **농어촌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 (생활여건) 주거·의료·교육 등 **도시 수준으로 정주여건 개선**
 - (농어촌 주민 주도 지역개발) ‘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 발전

7)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국정목표 1_전략 6_국정과제 37)

- (개요) **물가안정기조가 구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여 서민생활 안정 기반 마련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유통단계 축소, 유통경로 간 경쟁촉진, 유통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구조적 수급안정 기반 마련***
 - ※ (유통단계 축소) 직거래·사이버거래 소비자참여형 거래 활성화 (경쟁촉진) 농협계통 출하 및 판매 확대 (유통체계 효율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물류효율화, 비축확대

8)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국정목표 1_전략 1_국정과제 10)

- (개요)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 실현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업 지원 강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 활성화, **농어촌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9)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국정목표 4_전략 16_국정과제 102)

- (개요) 물, 공기, 대기질 등 **생활환경 취약지역을 없애고, 도시·농촌의 환경 질**을 모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농어촌 상수도 보급 확대,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충,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으로 **농촌환경 개선**, 정수장 고도화 및 수도관 정비로 안전한 수도물 공급

10)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국정목표 5_전략 21_국정과제 132)

- (개요) 동아시아 역내국가 및 신흥 시장국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 신흥 경제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시장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
 -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 동태적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한·중 및 한·중·일 FTA를 추진**하되,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민감 분야 보호**

※ 참고문헌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_www.korea2013.kr/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_보도자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 국정목표 선정」(2013.2.21)
- YTN_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5대 국정과제 발표」(2013.2.21)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2월 18일~22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바닥 돼지가격' ...6개월 간 농가당 1억600만 원 적자

- ▲대한한돈협회...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한 '12.9월~'13.2.14일 까지 전국 **한돈농가의 적자규모 총 6천440억 원**, 적자액이 **양돈농가 1호당 1억600만 원**에 달한다는 분석. 지난해 생산비(지육kg당 4천305원, 탕박기준)와 월평균 돼지가격의 차액에 지육률 84kg(110kg×탕박 76.7%) 적용, 두당 적자액을 산출한 값을 돼지도축두수와 합산한 액수. ▲한돈협회...전국 **한돈농가들의 적자규모** ('12.9월) 656억 원 → ('12.10월) 1천470억 원 → ('12.11월) 954억 원 → ('12.12월) 1천80억 원 → ('13.1월) 1천613억 원. 약 6개월간의 누적 적자액을 전국 농가수(6천20호)로 나눈 결과 농가당 평균 1억6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분석. **농가 규모별 적자액**은 (1천 두 규모) 7천200만 원, (2천 두) 1억4천400만 원, (3천 두) 2억1천700만 원, (5천 두) 3억6천200만 원. 올 들어 돼지평균가격이 생산비의 66% 수준인 지육kg당 2천857원에 머물며 **두당 12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급수출 등 특대책 없으면 80% 도산 전망**. ▲비대위의 대책...부산물물을 포함한 수입돈육에 대한 검역강화, 23개국 2천여 개에 달하는 수출작업장에 대한 위생점검, 그리고 돈가안정 시까지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을 무제한 강화

자료 : 축산신문(2013.2.20)

□ 양파 시장접근물량 2만1,000톤 시장 방출

- aT, 2~3월 양파 단경기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시장접근물량(TRQ) 2만 1,000톤 중 수입권구매 물량 1만7,000톤을 민간업체를 통해 3.15일까지 수입, 국내 시장에 방출할 계획. 정부, **최근 급등하는 국내산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해 긴급히 2013년도 시장접근물량(TRQ) 증량 추진 등 검토 중**. '12년 **국내 양파생산**은 생육기 저온과 수확기 고온·가뭄 등 생육부진으로 '11년도 보다 **21.3%감소**(119만5,000톤)됨에 따라 '13.1월 **국내산 양파(상품) 평균 도매가격 1,408원/kg**으로 **전년 동기대비(693원/kg) 103% 상승**, '13.2월 평균 가격도 1,689원/kg으로 높은 상태. aT, 국내 양파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국영무역으로 수입된 3,500톤은 도매시장에 직접 상장 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한편, **수입권 공매 물량 1만7,000톤도 조기 도입**을 독려해 서민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줄일 계획

자료 : 농축유통신문(2013.2.20)

□ 사업 중단 위기 몰린 ‘농작물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중단 위기**. 지난해 막대한 손해를 본 **보험사들이 정부 손실부담비율 조정 요구**했지만 **예산당국**, 국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거부**. 이에 따라 당초 2.18일부터 보험 판매에 나서려던 농식품부·NH농협 손해보험은 판매시기를 늦추고 대응책 마련. 2.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로 1,375억 원을 받았지만 **태풍·한파 등으로 4,910억 원 보험금 지급(3,535억 원 적자)해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률)이 357%**에 달한 것. 보험사들 “참여 어렵다”…판매 불투명.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과·배·단감·뽕은감·감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은 2.18~3.15일까지 판매될 예정

자료 : 농민신문(2013.2.18)

□ 한우암소 감축 장려금 지원 연장

- 정부·농협중앙회 암소감축 관련사업 모두 연장. 농식품부 **한우암소감축 장려금지원사업 당초 2월말 → 5월말까지 연장**, 단 **감축목표 10만 두를 조기달성할 경우 사업은 조기 종료**. 농협중앙회가 2011년부터 추진해온 **한우암소자율도태사업도 올해 말까지 연장**. 이 사업도 10만 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업물량이 달성되면 조기종료**. 1월 말 현재 농식품부가 300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한우암소감축사업과 농협중앙회의 자율도태사업 추진물량은 각각 6만7,000두 가량으로 당초 목표인 10만 두에 **약 3만3,000두 가량 부족**. 한우암소감축사업 대상은 도축 시 출하개월령을 기준으로 미경산우*는 24개월령, 경산우*는 45개월령 이내. 한편, 농협중앙회, 양돈농협을 통해 150억 원의 무이자자금을 들여 모든 5%를 감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 진행

※ 미경산우: 새끼 낳지 않은 암소 / 경산우: 송아지 생산용 암소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2.21)

□ 축산자조금 10년…정부 지원 줄고 사업액은 증가

- 축산자조금*사업이 시작된지 올해로 만 10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의 매칭펀드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가격안정사업과 같은 사업액은 증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지난 10년(한우 9년) 사업 계획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농가거출금의 10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매칭펀드는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 ▲한돈자조금의 경우 정부매칭펀드…(‘05) 45억 원 → (‘09, ‘11) 74억 원 → (‘12) 64억 원 → (‘13) 61억 원으로 감소 ▲한우자조금 매칭펀드…(‘06) 40억 원 → (‘09, ‘11) 90억 원 → (‘12) 77억 원 → (‘13) 72억 원으로 감소 추세. 반면, 2010년 이전에는 없던 수급안정과 유통구조개선이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유통구조개선사업은 ▲한우…2010년~2013년 153억2,800만 원, 수급안정사업비는 2011년~2013년 276억 원. ▲한돈…총 127억 원 가량의 예산 편성, 올해는 유통구조개선 사업 내에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사업이라는 항목을 포함시켜 이를 활용한 수매비축사업 추진

※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2.18)

□ 산지전용 면적 급증…대책마련 시급

- **산지전용 면적이 크게 증가**해 산지 보호 대책 마련 시급. 산림청, 임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산지전용면적은 연평균 **(‘97~‘06년) 8,100ha → (‘07~‘11년) 1만2,007ha**(‘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 **최근 5년간 산지 전용면적이 과거 10년간에 비해 48% 급증**. 이에 따라 **산림면적은 (‘97년) 644만1,000ha → (‘10년) 636만9,000ha 감소**. **산지전용면적이 증가한 이유…2007년 이후 주택·공장·도로·골프장 등을 만들기 위한 수요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

자료 : 농민신문(2013.2.20)

□ 축산업허가제·축산계열화사업법 시행...내용과 과제

< 축산 환경·경영 변화 '신호탄' >

- 2.23일부터 축산업허가제와 축산계열화사업법이 함께 시행
- 축산업허가제...가축사육 거리제한 규정이 제외돼 농가들 우려
- 축산계열화사업법...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어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

[축산업허가제]

- 구제역 파동을 겪으면서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격 도입
-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과 일정 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나 농가들은 정부가 정한 허가기준을 충족해야만 관련 사업에 참여
- 특히 축산업 허가자와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은 지정된 교육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해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
- 다만, 축산업계...최종 법안 시행령 통과과정에서 가축사육 거리제한 규정이 빠진 점을 우려
 -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가축사육 거리제한 기준 완화 문제가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을 더 거친 뒤 연구용역 등을 시행한 이후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함.

[축산계열화사업법]

- 그동안 축산계열화사업은 육계 등 중·소가축 위주로 확대됐으나 축산 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간의 계약상 불공정문제, 사육경비 산정 및 원자재 품질문제 등 대립을 완화해 줄 제도적 장치
 -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갈등 해소와 계열화사업의 질적 향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법률안에는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계획 마련과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사육경비 지급기준,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돼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위탁 사육계약 시 공정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
- 하지만 법률 시행초기에는 사육경비 산출 방식과 사육평가 방식 등에 혼선을 불러올 수 있어 마찰방지를 위한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의 긴밀한 상호 협의가 필요

자료 : 농민신문(2013.2.20)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

※ 본 자료는 2013년 2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과 동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종합

○ 2013년 1월, FAO 식량가격지수*는 전월과 동일(210 point)

- 식량가격지수: ('12.1월) 213 → (4월) 213 → (7월) 213 → (10월) 214 → (12월) 210 → ('13.1월) 210

※ 1990년 이후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5개 주요 농산물의 국제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매월 작성·발표(2002-2004년 평균=100)

- 곡물 및 설탕 가격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1.2%, 2.3%씩 하락한 반면, 유지류 가격지수는 4.4% 상승

□ 주요 품목별

○ [곡물] 전월(250 point) 보다 1.2% 하락한 247 point 기록

- 곡물 가격지수는 작황 개선에 따라 지난 10월(260 point)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보험세를 유지하고 있는 쌀 가격을 제외한 기타 곡물의 가격 하락에서 기인

○ [유지류] 전월(197 point)보다 4.4% 상승한 205 point 기록

- 지난 8월(226 point)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팜유 및 대두유의 가격 상승에 따라 반등

○ [육류] 전월(177 point) 보다 0.5% 하락한 176 point 기록

- 육류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육류 산업은 사료 가격 상승 및 소비 증가율 둔화 문제에 직면

○ [유제품] 12월(197 point) 보다 0.7% 상승한 198 point 기록

- 작년 7월(173 point) 이후 상승세 유지

○ [설탕] 전월(274 point) 보다 23% 하락한 268 point 기록

- 설탕 가격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과잉 생산 및 브라질, 태국 등 주요 수출국의 수출 증가 전망

□ 2012/13년도 세계 곡물공급량 전망

○ 2012/13년도 세계 곡물생산량: 2,302백만 톤 전망

※ 전월대비 0.9%↑, 전년 대비 2.0%↓

- 중국, 북미, 유럽 독립국가연합 등의 옥수수 생산량 증가에 따라 전망치 상향 조정

※ 주요 곡물 생산량 전망치:

→ 쌀 0.02% 증가(1.0백만 톤)

→ 잡곡 1.6% 증가(17.7백만 톤)

→ 밀 0.4% 증가(2.6백만 톤)

○ 2012/13년도 세계 곡물소비량: 2,327백만 톤 전망

※ 전월대비 0.6%↑, 전년대비 0.1%↑

○ 2013년도 세계 곡물 기말재고량: 495백만 톤 전망

※ 기초재고량 대비 3.0%↓

※ 주요 곡물 기말재고율 전망치:

→ 쌀 35.7%

→ 잡곡 13.4%

→ 밀 22.9%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